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9. 12. 29 (화) 13:30-16:3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입양정보원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법으로 재편성하고자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논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 프로그램

13:30~14:00 ● 등 록 사 회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0~14:10 ● 개회식

인사말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숙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 이경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10~14:40 ● 주제발표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15:50 ● 토론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

이명숙 (대한변협 이사)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강영임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 소장)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배태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50~16:00 ● 다과 및 휴식

16:00~16:30 ● 종합토론 및 폐회



Contents

□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1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문	69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1
정미화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	75
이명숙 (대한변협 이사)	81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87
강영임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 소장)	91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95
배태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9

발 제 문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T/F 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

□ T/F 회의 운영 배경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은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9차례나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아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 협약 등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로 입양 특례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양인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상호 조화와 연계 강화를 위한 민법과 입양특례법 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입양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Task Force 팀을 운영하여 이해 관련 집단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함
- T/F 회의 및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앙입양정보원으로부터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쟁점 연구”라는 주제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T/F 회의 추진 일정

구분	일시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제1차	2009. 9. 3 (목)	TF 운영 배경 및 향후 일정 소개 등	TF 위원 8인
제2차	2009. 9. 11 (금)	입양특례법의 개정방향 논의	TF 위원 8인
제3차	2009. 9. 25 (금)	요보호아동의 개념에 대한 보완 및 입양 요건과 절차에 관한 논의	"
제4차	2009. 10. 9 (금)	입양기관 관계자 의견청취 개정 초안에 대한 보완 논의	입양기관 관계자 4인 TF 위원 8인
제5차	2009. 11. 6 (금)	개정 초안에 대한 보완 논의	TF 위원 8인
제6차	2009. 11. 16 (월)	개정 초안에 대한 보완 논의	"
제7차	2009. 11. 30 (월)	개정 초안에 대한 보완 논의	"
제8차	2009. 12. 17 (목)	최종 법안 검토(축조)	"
제9차	2009. 12. 20 (일)	최종 법안 검토(축조)	"

□ T/F 회의 논의 및 결정 사항

1. 입양특례법의 패러다임 전환(안 제1조)

: 요보호 아동의 입양 촉진→일반 아동의 복지 증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u> <u>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u> <u>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u> <u>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u> <u>복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절차와</u> -----.

가. 개정 이유

- 입양을 다루는 법체계가 현재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원 가족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특례법상 입양을 하는 아동은 모두 요보호 아동임
- 그런데 부모가 직접 양자될 부모를 찾아서 사인 간의 합의로 하면 민법상의 일반 입양이 성립하고, 입양기관의 알선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면 요보호 아동에 의한 입양절차로 가서 특례법이 적용됨. 즉, 대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음
- 어떤 입양이든 입양가정에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함

나. 요보호 아동의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 요보호 아동을 폐지하게 되면 입양특례법의 존치 의의가 사라지게 됨(현 입양특례법의 큰 틀은 입양아동을 요보호아동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입양기관 및 복지 시책 등을 정하고 있는 것임)

다. 절충 의견 : 요보호 아동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

- 요보호아동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면 현재 요보호 아동의 정의 부분에 조항을 추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제1안 : 현재 입양 통계에 따르면 입양 아동의 출신가족은 미혼모가 90% 이상, 결손가정 및 조손가족, 빈곤 등이 소수의 이유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혼인 여부와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자를 요보호아동의 범위로 확대하자는 의견
- 제2안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친생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친생부모와

장기간 관계가 단절된 자”를 요보호아동으로 추가하여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및 비혼모에 의한 출산 아동의 입양 등을 포함시키자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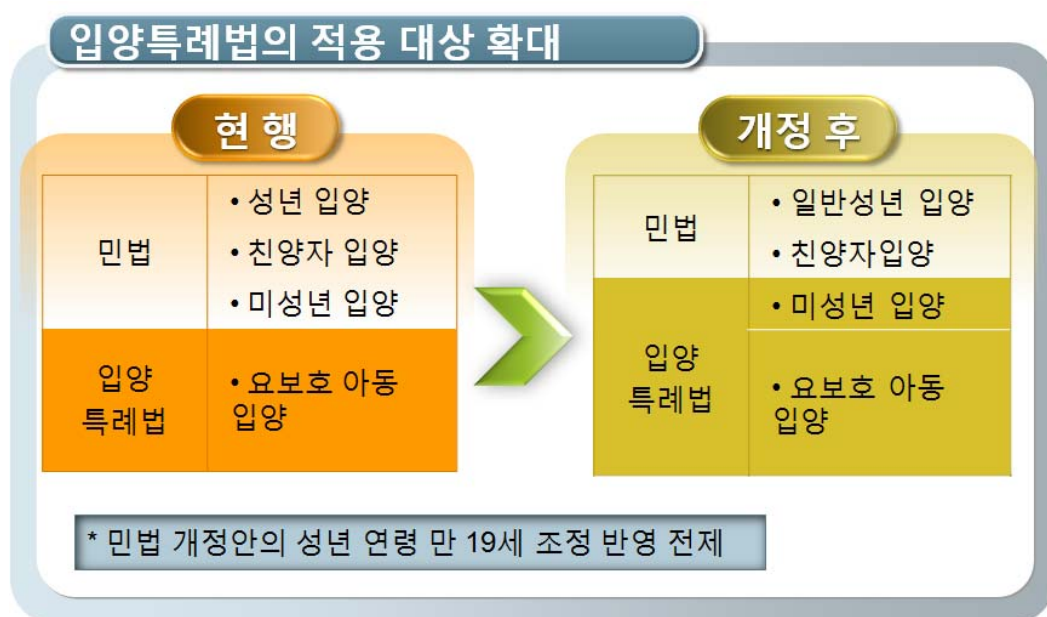
- 제1안에 대해서는 입양아 자체도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별로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차별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제2안에 대해서는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라. 기타 논의 : 원가정 보호

- 입양 중심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을 취해온 것으로부터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입양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하지 못할 경우,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면, 원가정 보호가 주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의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수용되지 못함.

마. 결정 사항

- 어떤 입양이든 입양가정에서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적용 대상을 일반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다만, 복지시책과 관련된 지원 대상은 기존의 요보호아동으로 한정하는 별도의 고려를 하기로 함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 부분은 삭제하고 민법상 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양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안 제1조)



2. 아동 연령과 미성년 연령의 통일(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19세 미만인 사람을 -----. 2.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입양되는 아동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제2조제5호에 따른 -----.

가. 개정 이유

- 입양법의 패러다임을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에서 미성년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복지도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양대상아동을 기존의 요보호아동에서 탈피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 사항

- 현행법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안된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의 아동·청소년의 연령 및 민법 개정안¹⁾의 성년 연령을 감안하여 아동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추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양자로 보내려는 사람에게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1) 법무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9.9.30. 참조

현행	개정안
	<u>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u> <u>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u>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u>보건복지가족부령</u> 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u>④-----입양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u>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 <u>보건복지가족부령</u> 으로 -----

가. 개정 이유

- 아동이 태어난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태어난 사회까지 포함시켜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부득이하여 입양을 하더라도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나. 결정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을 양자로 보내려는 사람에게 아동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함
- 현행법은 제4항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4항은 입양법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양되는 아동과 입양된 아동을 포함한 입양의 모든 과정에서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4. 양자될 자격 삭제(제4조)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u>요보호아동</u>으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u>자</u>이어야 한다.</p> <p>1. <u>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u>로서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u>보호의뢰한 자</u></p> <p>2. 부모(부모가 <u>사망</u>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u>보호의뢰한 자</u></p> <p>3. 법원에 의하여 <u>친권상실의 선고</u>를 받은 자의 <u>자</u>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u>보호의뢰한 자</u></p> <p>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u>보호의뢰한 자</u></p>	<p>제4조(양자될 자격) (삭제)</p>

가. 개정 이유

- 기존의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별도의 양자될 자격에 관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나. 결정 사항

- 현행 제4조의 양자될 자격은 삭제함
- 비록 입양특례법이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입양절차와 지원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제2조제3호) 규정은 남겨둠

5. 친권상실 신고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조의2(친권상실의 신고)①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친권자의 소재 파악이 2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p> <p>②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친권자 소재파악이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p>

가. 신설 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의 조항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시설에 맡겨 두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어 시설에 방임된 아동에 대한 입양기회가 차단됨

나. 결정 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친권상실 신고 사유를 추가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입양특별법에도 관련 규정을 둬으로써 시설에 방임된 아동의 입양기회 확보를 통해 아동의 가정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6. 양친될 자격 강화(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양친될 자격 등) ①이 법에 <u>의하여</u>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를 <u>부양함에</u>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u>상응한</u>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u>정신적·신체적으로</u>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법에 <u>의하여</u>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u>보건복지가족부령</u>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p>제5조(양친될 자격 등) ①----- <u>따라</u>-----<u>되려는</u> 사람은 -----<u>모두</u>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부양하기 위한</u> ----- 2. -----<u>상응하는</u> ----- 3. -----<u>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u> 갖춘 것 4.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5.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 <u>경우에는</u> -----<u>따라</u>----- 6. 그 밖에 <u>입양아동</u>-----<u>보건복지가족부령</u>으로-----.
<p>②양친은 양자를 <u>천한</u>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u>종사하지</u>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복지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p>

가. 개정 이유

- 양친의 자격 요건이 모호(예, 충분한, 현저한)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어려움 초래하므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 사항

- 개정안은 양친의 자격요건으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모호한 문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
- 또한 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화해나갈 계획임

7. 입양 동의 요건 조정(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자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부모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부모가 양육 의무를 해태한 경우 2. 부모의 중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아동에 대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단독 친권의 경우 다른 일방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개정 이유

- 현행법은 요보호아동만을 입양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도 그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개정한 것임
- 입양의 당사자로서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에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자 함

나. 결정 사항

- 양자될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입양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15세 미

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자 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유로 열거된 사망, 기타 사유 외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명시함으로써 친권상실된 부모의 동의권을 배제함(안 제6조제2항)
- 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8. 입양절차 의뢰 및 철회권 명시(안 제6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1(입양절차 의뢰요건)①아동이 태어난 직후 72시간이 지난 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양절차를 의뢰한 경우라도 부모 또는 모는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이후라도 입양신고 전까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입양기관은 입양 절차 개시 전에 보호자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입양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⑤제6조에 따른 입양의 의사표시와 제6조의1에 따른 입양절차 의뢰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 개정 이유

- 비혼모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아이 아빠의 불확실한 관계, 부모에 대한 죄책감 등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됨
-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비혼모에게 입양의사를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 사항

- 아동이 태어나기 전에 입양절차를 의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아동이 태어난 직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양 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출산

직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양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입양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입양숙려기간으로 72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과 기간을 72시간보다 길게 설정했을 경우 긴급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 입양 동의 숙려기간

- 미국 : 출생 후 24시간
- 유럽 일부 : 3일
- 필리핀 : 1주

- 또한 입양절차 의뢰에 관한 의사 결정 전에 보호자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이 제공 되도록 함(안 제6조의1제3항)
- 원칙적으로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전까지는 철회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친부모의 철회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어 없기 때문에 철회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기로 함
- 모든 입양 절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개정안을 반영하여, 비록 입양 절차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입양 허가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양의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이후에도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전까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양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둠

9. 국가기관의 허가제 도입(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의1에 따른 입양절차 의뢰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p> <p>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②이 법이 정한 입양은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p>
<p>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③제5조의 양친의 자격에 관련된 서류와 제6조 및 제6조의1 제1항의 입양요건에 관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그 밖의 서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가. 개정 이유

- 민법상 친양자 입양 이외의 일반 입양은 당사자들의 협의와 신고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상의 보장이 매우 미흡함
- ※ 입양의 성립 방식
 - 현행 민법상의 일반 입양 : 당사자의 합의 + 신고(계약형)(민법 제866조~제878조)
 - 현행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요건 구비+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
 - 현행 입양특례법상의 입양 : 입양기관이 개입(입양의 동기나 양친의 양육능력, 가정환경 등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고로 일반 입양의 효력 발생
- 국가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입양이 성립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반하고, 입양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 또한 입양제도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고,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도 반함
-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의 입양은 반드시 허가제로 하여야 함

나. 결정 사항

- 친양자 입양은 현행 민법 상의 입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성년 입양은 현행 민법 상의 당사자 계약형 입양 방식을 그대로 인정함
- 기존의 민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친양자 입양을 제외한 모든 미성년 아동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입양의 대상이 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모두 신고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의무화 함(안 제7조)

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입양 절차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입양

- ① 양자 자격 구비(보호자가 입양에 동의하는 19세 미만의 아동)
- ② 양친 자격 요건 구비(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인정, 양육과 교육능력, 가정 화목, 현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 없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 유무,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
- ③ 당사자의 입양 합의
 - 입양 아동의 의견 표명
(15세 미만 법정대리인 대락, 입양아동 의견 존중)
- ④ 동의권자의 입양 동의
 - 부모의 동의(가정법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대체 가능)
 - ※ 아이 출생 후 72시간 이후에만 가능
 - 부모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계존속의 동의/후견인의 동의
- ⑤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절차 의뢰 개시 요건 구비 증명 서류 구비)
- ⑥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입양허가 증명서 첨부)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1) 양자 자격 구비 : 아동의 처리절차
 -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 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
 - 전원기관에서는 수용 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 시작
 - 친부모 아동 출생 72시간이 지난 후 충분한 양육 상담을 받은 후 입양의뢰 가능
 - ① 수용보호의뢰(입양기관·시설의 장→시·군·구청장)
 - ② 후견인 지정 신청 및 승인(입양기관·시설의 장→시·군·구청장)
 - ③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등(입양기관·시설의 장이 신청, 시·군·구청장) / 친권상실선고 신청 및 승인(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후 친권자 소재 파악 2년간 불분명, 원가정 복귀 불가능)
 - ④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 ⑤ 입양대상확인서 발급 의뢰
- 2) 양친 자격 요건 구비 : 양부모의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②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교육
 - ③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
- 3) 공통의 처리절차
- ① 입양 동의
 - 부모의 동의
 - 가정법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대체 가능
 - 보호의뢰 시의 입양 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 가능
 - ※ 아이 출생 후 72시간 이후에만 가능
 - 부모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계존속의 동의/후견인의 동의
 - 아동이 15세 미만인 경우 아동의 의견 존중
 - ② 가정법원의 허가(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절차 의뢰 개시 요건 구비 증명 서류 구비)
 - ③ 양친에게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④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10. 입양의 효과(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조 (입양의 효과) ①---- 따라 입양되는 아동은 친생 부모가 동의하고 양친이 원하는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에 따라-----라도 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생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가. 개정 이유

- 현행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요보호 아동이며, 이 법은 요보호아동이 양친의 가정에서 친생자와 다름없이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것으로 보아,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결정 사항

- 현행 입양특례법은 일반 입양의 효과에 양친이 원할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현행처럼 일반 입양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과 15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경우, 독신자 입양 등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생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함.
-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래의 성과 양친의 성 중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1. 파양(안 제8조의1,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1(협의에 의한 파양) ①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입양은 입양 당시의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없다.
	②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재판상 파양) 친생 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 후 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된 경우 3. 입양부모가 불치의 질병에 걸려 아동을 돌 볼 수 없는 경우, 4. 기타 아동을 계속 양육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개정의 필요성

- 입양특례법에는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하고 있음(입양특례법 제26조)
- 협의 파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양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한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입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양절차 없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파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입양특례법에 파양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 사항

- 협의 파양
 - 친권자와 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 파양 인정
 -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개입이 의무화된 것과 균형상 파양 시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이 경우도 15세 미만의 아동의 의견 존중 의무화
 - 입양 후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 협의 파양 불가능
- 재판상 파양
 - 청구권자 : 친생 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검사
 - 파양 요건
 - ① 입양 후 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 불명된 경우
 - ③ 입양부모가 불치의 질병에 걸려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아동을 계속 양육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중앙입양정보원 법적근거 확보 및 기능 확대(안 제9조의1~제9조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조의1(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 ①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의 사후관리의 종합적 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한다.(이하 “입양정보원”이라 한다.)</p> <p>1. 입양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p> <p>2. 입양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3. 제2호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정관) ①입양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입양정보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업무) ①입양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3. 국내·외 입양 민원조정 및 종합상담 4.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5.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6. 입양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 7.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제9조의4(이사회) ①입양정보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임원) ①입양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중 상근임원은 1명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입양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신 설>	제9조의6(원장) ①원장은 입양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입양지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7(재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입양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8(자료의 제공) ①입양정보원은 입양에 필 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입양기관에 대하여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 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원에 제공된 자료는 입 양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9(「민법」의 준용) 입양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중앙입양정보원 법적 근거 확보

- 입양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 설립
- 외국 중앙국가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입양아동의 자격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관 설치
- 중앙입양정보원의 권한 및 예산 지원 근거 명시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전국 23개 국내외 입양기관 및 유관단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고, 입양 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못함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입양기관 간 연계와 조정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 * '08 입양 신청자 1,896명, 국내입양 1,303명으로 대기자가 존재함에도 국외입양(1,250명) 진행

○ 입양인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 뿌리 찾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가 부재하여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 초래
- 입양기관별 관리 중인 입양아동 및 친부모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뿌리 찾기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13.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명시 및 입양기관의 의무(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 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 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①-----입양되 는 아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 분한 상담-----먼저----- -----.
<신 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되는 아동에 대하여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입 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 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그 양 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실 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는 양친이 될 자의 제5조제1항제4호의 범죄기록·아동학대·성폭력 여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 한 정보를 입양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입양정보원 및 입양기관 -- 사람 또는 종사하 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 누설해서는 -----.
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 성립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사람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입양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⑧ ----- 12개월-----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아동----- -----.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 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⑨-----아동을----- 그가 해당 ----- -----대통령령으로----- -----.
<신 설>	⑩입양기관의 장은 원활한 입양을 위하여 입양기 관 간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명시
 - 입양기관은 국내에서 입양 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국외입양 추진 가능한 시점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 입양기관의 입양 전 입양의뢰 친부모에게 사전 상담의무 규정 명시
- 입양부모의 가정환경 조사시 양친될 자의 범죄기록·아동학대·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입양 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입양성립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대한 사후관리 확대(6→12개월)
- 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수 금지 조항 명시

14. 입양인의 정보접근권 명시(안 제12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1(양자된 사람의 정보 접근권) ①이 법에 따라 양자된 성년이 된 사람과 친생부모 및 그를 부모로 둔 형제, 자매, 입양부모는 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에 관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양자된 사람이 성년이 아닌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양친과 아동이 공동으로 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중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입양된 자가 민법상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정보 중 의료적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의 범위, 신청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단, 친생가족, 입양가족 및 입양인의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및 본적, 주민번호)는 개인 정보보호차원에서 예외로 한다.

- 입양인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성년이 된 입양인과 친생부모 및 그를 부모로 둔 형제, 자매, 입양부모는 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에 관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도 입양아동, 양친,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의 요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
 -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입양된 자가 민법상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정보 중 의료적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명시

15. 입양 수수료 개선(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3호의 요보호 아동의 입양의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 입양기관은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국가에서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명시

16. 입양절차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안 제21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1(입양절차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제6조의1 제2항에 의한 입양절차가 의뢰된 아동에게 발생하는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절차와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의료적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 입양절차 의뢰 이후 법원의 허가 전의 기간 중, 아동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보호를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적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함

17. 사회복지서비스(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u> 아동을 입양한 가정 <u>대하여</u>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과 입양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2. 입양기관이 후원하는 입양가정 모임 및 입양인 사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3. 개인정보의 열람 등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 확대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18.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u>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 ----- 대통령령으로 ----- 범위-----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및 의료비와 그 밖에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 ----- 따라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을 한 경우에만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급
- 아동 교육비 지급 명시

19. 관계기관의 협조의무(안 제23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1(관계기관의 협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중 양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3만여명인 입양인의 친부모찾기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 확대

20. 벌칙 상향 조정(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제10조제1항에 따른-----수행한-- 5년-----5천만원-----.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6항을-----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에 의한 입양기관만이 입양알선을 할 수 있으나,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 불법으로 입양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상향 조정(3년 이하 2천만원 → 5년 이하 5천만원)

※ 아동복지법 제40조 : 아이매매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21.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27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1(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2. 제12조의1의 제2항·제3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신 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입양정보원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입양인의 출생정보와 관련하여 입양기관에서 입양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22. 기타 논의

가. 출생신고의 의무화

1) 필요성

- 사실상 입양이지만, 입양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펴보면 입양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
 - ※ 10대 국내입양기관 협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입양건수 1,864건 중 입양신고 건수 총 46건(2.5%에 불과)으로 입양 부모의 97% 이상이 입양 신고가 아닌 친생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2006 국정감사자료)
- 따라서 아무리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복리 측면의 강화를 위해 여러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아이의 출생과 함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음

2) 의무화 방안

- 입양기관을 통한 방법 : 입양기관에 신고 권한과 신고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그것을 안하는 경우 입양기관의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출생신고 의무화는 입양 의뢰된 아동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사적 입양을 통해 암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제시됨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을 통한 정비 : 그러나 이 문제는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 등을 통해 출생시 아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출생신고 의무화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함

나. 자의 인도 시기

- 현행법에 자의 인도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입양절차가 개시되면 바로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고,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관행상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허가제로 전환한다면 법원의 허가 이후 인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이후 인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미리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함

다.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조항 삭제(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삭제

- 민법보다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법에 따르기로 함

II. Explanatory Material for Revision of Special Adoption Act

I. Discussion at the T/F Meeting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Adoption Law & Discussion Results

☐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the T/F

- The Special Act Relating to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hereinafter "Special Adoption Act") has been revised 9 time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hildren available for adoption and adoptive families.
- However, as the need arose to further amend the Special Adoption Act to better accommodate the changes in adoption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Hague Convention,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and rights of children,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MHWWA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this matter formulated a draft and gathered feedback from the general public through public hearings, etc.
- Amid the discussion, many views of adoptees and adoption agencies regarding the draft were put forward and the need for overall review of the civil laws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was raised to ensure better harmony and relevance between the two laws.
- Accordingly, a task force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formulating a draft that can strike a harmony between the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As a result, the consensus reached among stakeholders and groups, and the views of relevant experts were reflected in the final draft.
- KWDI(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as commissioned by KCAR

(Korean Central Adoption Resources) to conduct the T/F meetings and public hearings under the theme of "The Study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Special Adoption Act".

□ Chronology of T/F Meetings

No.	Date	Agenda	Attendees
1st	2009. 9. 3 (Thu.)	Background for creating the TF & future plan, etc.	8 TF members
2nd	2009. 9. 11 (Fri.)	Direction for revising the Special Adoption Act	8 TF members
3rd	2009. 9. 25 (Fri.)	Review of the concept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discussion of adop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	"
4th	2009. 10. 9 (Fri.)	Obtain views of the people from adoption agencies and discuss modifications of the draft	4 persons from adoption agencies 8 TF members
5th	2009. 11. 6 (Fri.)	Discuss modifications on the draft	8 TF members
6th	2009. 11. 16 (Mon.)	Discuss modifications on the draft	"
7th	2009. 11. 30 (Mon.)	Discuss modifications on the draft	"
8th	2009. 12. 17 (Thu.)	Final review of the draft	"
9th	2009. 12. 20 (Sun.)	Final review of the draft	"

☐ Discussions & Decisions at the T/F Meetings

1. Shift in Paradigm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 draft Article 1)
: Promote the adoption of th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Improve the welfare of children in general

A. Reason for Revision

- Currently, the laws regarding adoption are characterized by dual track approach: civil law and the Special Adoption Act.
- In that adoption takes place when a birth family is not able to protect a child, the children that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open adoption, closed adoption and adoption by the Special Adoption Act are the ones in need of protection.
- As it stands now, however, the case where birth parents give up a child to an adoptive parents by private agreement constitutes 'the open adoption' as set forth in the civil law, whereas the agency-directed adoption constitutes 'adoption of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which entails an application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n other words, despite that the same child is at issue, different laws and procedures apply.
- Regardless of the types of adoption, adoption procedures need to be refurbished to ensure that the welfare of children concerned is considered as the foremost priority.

B. Dissenting voices stating that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hould be maintained.

- The purport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tself will be lost if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is eliminated. (Currently, the Special Adoption Act defines the adopted children as th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in accordance with such definition, policies of welfare,

adoption agencies, etc. are established.)

C. A compromising view : Broaden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The defini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may be broadened by adding more provisions to the Special Adoption Act, if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needs to be maintained.
- Option 1 : to broaden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o include those who can not be brought up by birth parents due to discrimination caused by marital status, nationalities, social status, economic reasons, etc., considering the adoption statistics that show more than 90% of cases of adoption take place from unmarried mothers and the small remainder from dysfunctional families,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poverty, etc. This is being considered,
- Option 2 : to include children who can not be brought up by birth parents due to economic reasons and children born to unwed mothers under the category of adoption by placing 'those who cannot be brought up by birth parents and who have been alienated for long by their birth parents due to other inevitable reasons' under the concept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As for option 1, some commented that occasionally adoptees may be discriminated against but such discrimination does not renders it impossible for birth parents to bring up the children so that it simply has the effect of exposing the discrimination. As for the 2nd option, some commented that a new debate may arise over 'what constitutes the situation where a child cannot be brought up by birth parents'.

D. Other discussions : Protection by birth family

- An opinion was expressed that, though the policy of dealing with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has been centered around adoption, now, the protection of birth families should take priority and only when such protection effort fails,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ond best.

-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s to find a family that would raise the child concerned well in case birth parents are not able to bring up the child, the prevailing opinion was that having 'protection by birth family' as its primary objective is not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Therefore, this opinion was not accepted.

E. Decisions

- Application of the Special Adoption Act should be broadened to cover children in general since, regardless of the types of adoption, adoption procedures need to be refurbished to ensure that the welfare of children in the adoptive families is considered as the foremost priority. It was decided, however, that welfare policies should apply only to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Reflecting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shall be removed from the objectives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special provisions pertaining to adoption shall be introduced into civil law. The paradigm for the Special Adoption Act shall be shifted toward defining procedures and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interests, rights, and welfare of adoptive children.(Draft Article 1)

2. Equation of Child Age with Minor Age(Draft Article 2)

A. Reason for Revision

- In order to shift the paradigm for the Special Adoption Act from the promotion of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o the improvement

of welfare of minor children to be adopted,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concept of 'children available for adoption' from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o all minor children.

B. Decisions

- Though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defines the age of children as below 18, the revised Special Adoption Act shall define the age of children as below 19 considering the age of children/youth as set forth in the 'Child & Youth Welfare Act(draft)' that integrates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and the age of adults as set forth in the draft of revised civil law²⁾.

3. Addition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raft Article 3)

A. Reason for Revision

- The intention is to emphasize the need for 'protection by birth family' and the fact that, even in the case of an inevitable adoption, a high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doption at home' rather than 'adoption oversea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 as well as the family in which the children were born.

B. Decisions

-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ren can be brought up safe and sound in the home and country into which they were bor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information or counsel regarding child-rearing for birth parents who are considering adopting out their child an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custodians or relatives to bring up children.

2) Ministry of Justice, Refer to material from public hearings held for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2009.9.30.

- Article 4 of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prescribe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assist adoptive children in adapting to the new families. Whereas, in order to implement the shift in paradigm for the Special Adoption Act, Article 4 of the draft prescribe the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improve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the adopted children and the ones to be adopted in all the phases of adoption process.

4. Removal of Qualifications for Adoptive Children (Article 4)

A. Reason for Revision

- There is no need to prescribe qualifications for adoptive children if all the children below the age of 19, instead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become available for adoption.

B. Decisions

- Qualifications for adoptive children as set forth in Article 4 of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shall be removed.
- Even if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s extended to incorporate all children below 19 beyond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he provision (Paragraph 3 of Article 2) pertaining to the defini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is left to remain as a different set of adoption procedures and support should be defined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5. Introduction of Provision Regarding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Draft Article 4-2)

A. Reason for Introduction

- Article 12 of the Child Welfare Law dictates that city mayors, provincial governors, county governors, heads of districts, and heads of wardens may

request the court to restrict or terminate the parental rights of biological parents only when such request i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s the biological parents abuse their parental rights, engage in conspicuous depravities, or other significant causes that prohibit them from exercising parental rights are found.

- However,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as set forth in the Child Welfare Law,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nnot be announced, thereby precluding the chances for adoption even in the case of birth parents leaving their child to child care centers and remain incommunicado for long.

B. Decisions

- To advance the opinion that one more cause for announcing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should be adde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heir families by incorporating a relevant provision into the Special Adoption Act, thus giving children left to child care centers chances to get adopted.

6. Tightening of the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Draft Article 5)

A. Reason for Revision

- Despite that the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are defined in an ambiguous manner (e.g. sufficient, conspicuous), the Enforcement Decree or Detailed Enforcement Rules does not contain specific provisions thereby causing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Act. Therefore, detailed guideline should be established.

B. Decisions

- In the revised draft,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must not have a record of any crime such as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etc" should be added to the current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and

ambiguous phrases need to be modified for clarity.

- Lack of specifics in the Act shall be addressed by specifying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Detailed Enforcement Rules.

7. Adjustment of Consent Requirement (Draft Article 6)

A. Reason for Revision

- A consent requirement exists as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is targeted only at th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However, a necessary adjustment was made as the revised draft shall be applied to children in general in addition to th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To clear up confusion by drawing a distinction between acceptance indicated by an adoptee and a consent incidental to acceptance.

B. Decisions

- Adoptees aged 15 or above indicate acceptance of adoption themselves, and the ones below 15 indicate such acceptance via their legal representative. Even in the latter case, the intention of the child to be adopted should be respected (Draft Paragraph 1 of Article 6)
- Right of consent by birth parents who have their parental rights terminated shall be excluded by specifying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s a reason for parents being unable to consent to adoption along with death of parents and other reasons. (Draft Paragraph 2 of Article 6)
- The intention of parents may be replaced with the decision of the family court in case that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parental acceptance or consent (Draft Paragraph 3 of Article 6)

8. Request of Adoption Procedure & Right of Revocation (Draft Article 6-1)

A. Reason for Revision

- Unwed mothers give birth in an anxious state of mind from many stresses such as societal bias against unwed mothers,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unstable relations with the baby's father, guilty feeling toward her parents, etc.
- Considering their uneasy state of mind, there is a need for introducing 'grace period' for revoking consent during which, unwed mothers can consider whether to adopt out their child or not.

B. Decisions

- The request for initiating adoption procedure prior to giving birth to a baby should not be accepted.
 - The request for adoption procedure should be allowed to be made no earlier than 72 hours after giving birth to a baby. The intention is to prevent an unwed mother from giving a hasty consent to adoption without due consideration while she is emotionally unstable right after giving birth.
- Opinions were divided over the length of the grace period. Some commented that 72 hours is too short to consider adoption, while others said that there would be chances that children in need of emergency medical care may not be able to receive appropriate medical care in a timely manner if the grace period is longer than 72 hours.

※ Grace period for consent

- US : 24 hours after giving birth
- Parts of Europe : 3 days
- The Philippines : 1 week

- Sufficient counsel as to child-rearing should be provided to the custodian prior to making decisions about initiating adoption procedure. (Draft Paragraph 3 of Article 6-1)
- In principle, it can be said that consent to an adoption can be revoked before making a report since an adoption comes into effect by making a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etc'. However, it was decided that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e right to revoke consent is needed as there is little awareness of such right on the scene where actual adoptions take place.
- Reflecting the revised draft that requires all the adoption procedur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the intention to start off the adoption procedure can be revoked in principle prior to the permission of the court even if the adoption procedure has been requested. Even after the permission from the court, an adoption procedure can be allowed to be revoked before it is reported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if an extraordinary change in situation occurs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the adoptee.

9. Introduction of 'Permission from National Authority' (Draft Article 7)

A. Reason for Revision

-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open adoption unlike closed adoption takes place based on mutual agreement of both parties concerned and their reporting, thus leaving little room for protective procedur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hildren.

※ Three ways of adoption coming into effect

- Open adoption by civil law : mutual agreement of both parties + reporting (on a contract basis, Civil law Articles 866~878)
- Closed adoption by civil law :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losed adoption +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Civil law Article 908-2 ~

908-3)

- Adoption by the Special Adoption Act : adoption agency-directed adoption (considering the motives for adoption, child-rearing ability, home environment, etc.), It becomes an open adoption when reported.

- Allowing an adoption to take place solely based on mutual agreemen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s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children and leads to the abuses of adoption procedure.
- In addition, it runs counter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states that adoption shall take place with the interests of children taking utmost priority and adoption shall be allowed only by national authorities.
- Accordingly, all the adoptions of minors should take place based on permission.

B. Decisions

- As for closed adoption, the current adoption-related provisions of civil law shall apply as they are.
- As for 'adoption of an adult', adoption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both parties as set forth in civil law is recognized as it is.
- All adoptions of minors apart from 'closed adoption,' which takes place based on the existing civil law shall be governed by the procedures as set forth in the Special Adoption Act.
- Intervention by national authorities shall be made obligatory by subjecting all open adoptions of children below the age of 19 as well as agency-directed adoptions to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before they are reported.
(Draft Article 7)

C. Specific Adoption Procedure as set forth in the Revised Draft

○ Adoption by Mutual Agreement

- ① Qualification as adoptive child (child below 19 whose adoption is consented by the custodian)
- ② Qualification as adoptive parents (sufficient wealth, recognition of freedom of religion, child-rearing, and educational abilities, harmony within the family, no outstanding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no crime record such as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other requirements as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 ③ Mutual agreement on adoption
 - An adoptee should express opinion.
(For children below 15, a legal representative indicates acceptance in his or her place. Opinion of an adoptee should be respected.)
- ④ Consent to adoption by the legal guardian
 - Consent by parents (can be replaced with a decision of a family court which is equivalent to consent)
 - ※ Only after 72 hours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 Consent by a lineal ascendant/guardian if parental consent is not possible.
- ⑤ Make a request for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document that proves qualification as adoptive parents + document that proves that the adoption has been duly consented + document that proves that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adoption procedure are met).
- ⑥ Reporting according to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attached with the Certificate of Adoption Permission)

○ Adoption Agency-directed Adoption

- 1) Establish qualification as adoptive child : procedure of handling children
 - Child guidance clinics, etc. transfer children to different places according to his or her psychological condition (child care centers, foster homes, hospitals, etc.)
 - Child-receiving institution makes a request for child acceptance (to

heads of city·district office·ward office) and adoption procedure commences)

- Birth parents can make a request for adoption after getting sufficient counseling and 72 hours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 ① Make a request for acceptance of children (head of adoption agency·center→to heads of city·district office·ward office)
- ② Request for guardian designation & approval (head of adoption agency·center→ to heads of city·district office·ward office)
- ③ Confirmation notice of 'person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etc. (head of adoption agency·center makes a request to heads of city·district office·ward office) / Request for & approval of the proclamation of parental right termination (unable to locat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for two years after the child was placed in the child care center or adoption agency, impossible to send the child back home)
- ④ Last name and a place of family register should be created in case of an abandoned child
- ⑤ Request for issue of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s Adoptee

2) Establish qualification as adoptive parents : Procedure of adoptive parents

- ① Hand in the application and receive counsel
- ② Give adoption counsel and child-rearing education to adoptive parents
- ③ Review family condition

3) Common Procedure

- ① Consent to adoption
 - consent by parents
 - Parental consent can be replaced with a decision of a family court equivalent to parental consent.
 - Consent to adoption given at the time of leaving the child to care for protection can replace 'consent to adoption'.
 - ※ Only after 72 hours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 Consent by a lineal ascendant/guardian if parental consent is not possible.
 - For a child below 15, Opinion of the child should be respected.
- ②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document that proves qualification as

adoptive parents + document that proves that the adoption has been duly consented + document that proves that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ng adoption procedure are met)

- ③ Records of child, his or her belongings should be handed over to adoptive parents.
- ④ Go through reporting procedure according to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10. Effect of Adoption (Draft Article 8)

A. Reason for Revision

- Opinions were expressed that full adoption should be specified even in case that an adoption takes place by the Special Adoption Act, considering the fact that children available for adop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are the ones in need of protection and this Act intends to ensure that every child in need of protection gets brought up and grow as if he or she were a birth child in the adoptive family.

B. Decisions

-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recognizes the effect of an open adoption and the exception that the adopted child can take the last name and the place of family register of the adoptive parents if the adoptive parents wish so.
- The revised draft still recognizes that the adoption by the Special Adoption Act carries the effect of open adoption as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does. In case that the adoptees are aged between 15 to 18, in order to enable the use of full adoption as set forth in civil law by single persons, etc, it will be allowed for adoptive parents to register the adopted child as their birth child after gaining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if necessary for the interests of the child.

- In case that the adoption of an adopted child who took the last name and the place of family register of the adoptive parents is cancelled or given up, the adopted child can make a choice out of his own volition between his or her original last name and adoptive parents' last name.

11.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Draft Article 8-1 or 8-2)

A. Reason for Revision

- Since the Special Adoption Act does not contain provisions relating to the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civil law is applied. (Article 2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 Since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comes into effect when it is reported according to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mor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such termination. In addition, since most adoptions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takes place in the form of full adoption, adoptive parents often can achieve an 'effective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winning in a lawsuit to confirm there's no blood ties between themselves and the adopted child without going through the 'due procedure of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 Procedure of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etc. needs to be provided for in the Special Adoption Act.

B. Decisions

-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is acknowledged if the adoption took place by consent of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s.
 - A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i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just as the intervention by a family court is

mandatory in the establishment of adoption.

- In such case, it is obligatory to respect the opinion of children below 15.
-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is not possible if the adopted child has been registered as a birth child after adoption.

○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by Court Ruling

- Applicant : birth parents, adoptive parents, guardian at the time of adoption, prosecutor
- Requirements for Termination of Adoptive Relationship
 - ① abuse, abandonment, neglect of the child or other violations of the child's rights after adoption
 - ② Adoptive parents are dead or their fate has been unknown for a long time
 - ③ Adoptive parents are down with incurable disease and unable to take care of the child.
 - ④ Other significant and material reason arises that prevents adoptive parents from raising the child

12. Legal Basis & Enlarged Function of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Draft Article 9-1~ 9-9)

○ Securing legal basis of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 Establish a central state agency taking overall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adoption at home and abroad
- Establish an entity exclusively in charge of international exchange with foreign central agencies and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for adoptive children, etc.
- Specify the authority of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and basis for budgetary support

○ Establish a mechanism for managing and supporting the promotion of domestic adoption

- Currently there is no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of overall and

coordinated management of 23 adoption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and adop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ing shared.

- Promote domestic adop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to match adoptive children and adoptive parents, and encouraging th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adoption agencies

* 1896 applications for adoptions were made in '08 and 1,303 families were on the wait list for domestic adoption. Still, for 1,250 children, international adoption procedure set in.

○ Establishment of a one-stop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post-adoption services

- The absence of a unified channel for helping adoptees track their ancestry causes confusion and inconvenience in their effort to find their biological parents.
- More systematic support can be rendered to help them track their ancestry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manages information on adoptive children and birth parents dispersed across adoption agencies in an integrated way.

13. Statement of Preference for Domestic Adoption and Obligations of Adoption Agencies (Draft Article 12)

○ Clear statement of preference for domestic adoption

- Adoption agencies should make effort to find adoptive parents in Korea first.
- The time when the effort to find adoptive parents abroad can be made should b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Decree.

○ Specify the obligation on the part of adoption agencies to provide counsel to birth parents requesting adoption before an adoption takes place

- An investigation into home environment of adoptive parents must include criminal records such as child abuse, sexual assault, etc.
- Enact a provision tha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adoption agencies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for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 Lengthen the post-adoption supervision over mutual adaptation between adoptive child and adoptive parents after adoption (6→12 months)
- Specify 'confidentiality clause' pertaining to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discharging works by the employees of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and adoption agencies

14. Statement of Adoptee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Draft Article 12-1)

- Enact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adoptees'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 An adoptee who became an adult, birth parents, siblings from the same birth parents, adoptive parents may request a viewing or copying of the information held by the Central Adoption Support Agency or adoption agencies.
 - However, if birth parents do not consent or refus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information disclosure may not be mad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privacy of birth parents.
 - The Special Adoption Act shall be modified to enable information disclosure with the request or consent by the adoptee, adoptive parents or biological parents even if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s made by an adoptee who hasn't reached adulthood.

- Specify that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if a special reason such as a medical problem, etc. requires so though the birth parents did not consent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adoptee is a minor by civil law.

15. Improvement of Adoption Fee (Draft Article 20)

- Adoption agencies is forbidden to receive adoption fee from adoptive parents.
- Specify that the government pays the cost for the arrangement of adoption.

16. Introduc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Children under Adoption Procedure (Draft Article 21-1)

-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prescribes the matters necessary for providing protection to children who are in need of medical care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request for adoption procedure and the acquisition of permission from a family court.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at takes custody of children is allowed to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17. Social Welfare Service (Draft Article 22)

- Strengthen the obligation on the part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 to adoptive children
 - Provide adoptive families or children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viewing of personal information, etc. to track down the whereabouts of the original family members
- Payment of Child-rearing Subsidy, etc. (Draft Article 23)
 - Pay child-rearing endowment, medical expense, child-rearing subsidy, etc.

to all the families that adopt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without going through agency-directed adoption, though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prescribes for ~~the~~ payment of child-rearing subsidy, etc. only in the case of agency-directed adoptions.

- Specify the payment of child education expense

○ State authorities' Obligation to Collaborate (Draft Article 23-1)

- Extend post-adoption services by enabling 230,000 adoptees to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in tracking down their biological parents

18. Tightened Penalties (Draft Article 27)

- Only adoption agencies accredi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city mayors or provincial governors can make the arrangements for adoption. Penalties for illegal adoption arrangements offered by websites, etc. shall be tightened. (No more than 3 years, 20 million won → No more than 5 years, 50 million won)

※ Article 40 of Child Welfare Law : People trafficking in children shall be subject to labor imprisonment for 10 or less years or a fine of 50 million or below.

19. Other Discussions

A. Obligation to Report Birth

1) Necessity

- current reality relating to adoption shows that most adoptive parents falsely register their adopted child as their birth child.

※ According to the data provided by top 10 domestic adoption agencies, out of total 1,864 adoption cases, only 46 cases were reported as adoption (a mere 2.5%), which means more than 97% of adoptive

parents register the adopted child as their birth child. (2006 National Audit Data)

- Accordingly, actual effect of revising the Special Adoption Act would not be achieved if such practice persists, no matter how hard we may try to tighten various requirements to boost the interests of children by revising the Special Adoption Act.
- Therefore, ways should ensure that births are reported mandatorily with the birth of babies. Only then, the purport of the Special Adoption Act shall be fulfilled.

2) Mandatory Reporting

- Ways through adoption agencies : Opinions were expressed that adoption agencies should be obligated to or given right to report and get subjected to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pertaining to the accreditation of adoption agencies when they fail to do so. However, concerns were raised that mandatory reporting of birth should apply commonly to all the people not just related to the children to be adopted, as the black market for adoption by private agreement may grow.
- Modifications via Laws related to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etc. and Medical Service Act : This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doption Act. It can be resolved by requiring the Laws related to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etc., and Medical Service Act to mandate a mandatory reporting of child-related information upon birth.

→ It was decided that mandatory reporting of birth should be handled separately.

B. Time of Delivery of Adoptee

- The current Special Adoption Act does not define the time of delivery of adoptees. In reality, a child is sent to the adoptive family and is raised in

that family immediately when the adoption procedure commences.

- That's a conventional practice since the current Act is based on reporting system. However, it should be more desirable to deliver a child after the court grants permission if the reporting system is replaced with permission system.
- Considering a multitude of possibilities, it was deci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ave possibilities of an adoptee being delivered to the adoptive family in advance even though, in principle, adoptees should be delivered to adoptive families after the permission granted by the court.

C. Removal of Provisions Relating to Action for Adoption Revocation (Draft Article 9)

- The matters relating to action for adoption revocation shall follow the provisions in the civil law as the Special Adoption Act prescribes it more narrowly than the civil law.

Ⅲ.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u>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u>아동의 입양에 있어 민법상 입양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u>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u>	1. “아동”이라 함은 <u>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u>
2. “ <u>요보호아동</u> ”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u>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u> 을 말한다.	2. “ <u>입양아동</u> ”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입양되는 아동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 <u>입양아동</u>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 <u>요보호아동</u> ”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u>규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u> 을 말한다.
4. “ <u>부양의무자</u> ”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u>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u> 를 말한다.	4. “ <u>부양의무자</u>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u>따른 부양의무자</u> 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제3조 (책임) 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아동을 양자로 보내려는 사람에게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게 그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입양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현행	개정안
<p>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p> <p>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p> <p>4. 입양 및 <u>가족</u> 지원</p> <p>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p> <p>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p>7. 입양 모범사례 발굴</p> <p>8. 그 밖에 <u>보건복지가족부령</u>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p> <p>제3조의2 (입양의 날) 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장 입양의 요건</p> <p>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u>의하여</u> 양자가 될 자는 <u>요보호아동</u>으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u>자</u>이어야 한다.</p> <p>1. 보호자로부터 <u>이탈된 자</u>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u>보호의뢰한 자</u></p> <p>2. 부모(부모가 <u>사망</u> 기타 사유로 <u>동의할</u>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입양기관에 <u>보호의뢰한 자</u></p> <p>3. 법원에 의하여 <u>친권상실의 선고</u>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u>보호의뢰한 자</u></p> <p>4. <u>기타</u>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u>보호의뢰한 자</u></p>	<p>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p> <p>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p> <p>4. <u>입양아동 및 입양가족</u>에 대한 지원</p> <p>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p> <p>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p>7. (삭제)</p> <p>7. 그 밖에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필요한 사항</p> <p>제3조의2 (입양의 날) 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p> <p>②<u>국가와</u> 지방자치단체는 <u>제1항에 따른</u> 입양의 날 취지에 <u>맞는</u>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장 입양의 요건</p> <p>제4조(양자의 자격) (삭제)</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p><신설></p> <p>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p> <p>②양친은 양자를 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 (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의2(친권상실의 신고) ①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친권자의 소재 파악이 2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p> <p>②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친권자 소재 파악이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p> <p>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갖춘 것 4.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5.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6. 그 밖에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p>② 양친은 양자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복리에 반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p> <p>제6조 (입양의 동의) ①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자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②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부모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부모가 양육 의무를 해태한 경우 2. 부모의 중한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아동에 대한 양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단독 친권의 경우 다른 일방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의1(입양절차 의뢰요건) ①아동이 태어난 직후 72시간이 지난 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②제1항에 따른 입양절차를 의뢰한 경우라도 부모 또는 모는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이후라도 입양신고 전까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신설>	③입양기관은 입양 절차 개시 전에 보호자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④입양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신설>	⑤제6조에 따른 입양의 의사표시와 제6조의1에 따른 입양절차 의뢰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3장 입양절차	제3장 입양절차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 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양친될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입양의 동기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의1에 따른 입양절차 의뢰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 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이 법이 정한 입양은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의 양친의 자격에 관련된 서류와 제6조 및 제6조의1 제1항의 입양요건에 관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그 밖의 서류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양자) 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조 (입양의 효과) ①이 법에 따라 입양되는 아동은 친생 부모가 동의하고 양친이 원하는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라도 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③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생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1(협의를 의한 파양) ①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입양은 입양 당시의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없다.
<신설>	②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의2(재판상 파양) 친생 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 입양 후 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된 경우
	3. 입양부모가 불치의 질병에 걸려 아동을 돌 볼 수 없는 경우,
	4. 기타 아동을 계속 양육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삭제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신설>	제9조의1(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①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의 사후관리의 종합적 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한다.(이하 “입양정보원”이라 한다.)
	1. 입양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입양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2호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9조의2(정관) ①입양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②입양정보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신설>	<p>제9조의3(업무) ①입양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3. 국내·외 입양 민원조정 및 종합상담 4.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5.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6. 입양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 7.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설>	<p>제9조의4(이사회) ①입양정보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5(임원) ①입양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중 상근임원은 1명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입양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제9조의6(원장) ①원장은 입양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은 입양지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제9조의7(재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8(자료의 제공) ①입양정보원은 입양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입양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원에 제공된 자료는 입양 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9(「민법」의 준용) 입양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입양기관	제4장 입양기관
제10조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제10조 (입양기관) 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p>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u>보건복지가족부령이</u>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삭제 <1999.1.21></p> <p>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u>입양</u> 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u>충분한 입양상담</u>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u>보건복지가족부령이</u>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삭제 <1999.1.21></p> <p>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u>입양</u> 되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되는 아동에 대하여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③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는 양친이 될 자의 제5조제1항제5호의 범죄기록·아동학대·성폭력 여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p> <p>④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입양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⑥입양정보원 및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p> <p>⑦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 성립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u>보건복지가족부령</u> 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⑧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12개월까지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 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⑨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그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⑩입양기관의 장은 원활한 입양을 위하여 입양기관 간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의1(양자된 사람의 정보 접근권) ①이 법에 따라 양자된 성년이 된 사람과 친생부모 및 그를 부모로 둔 형제, 자매, 입양부모는 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에 관한 정보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② 양자된 사람이 성년이 아닌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양친과 아동이 공동으로 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입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중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입양된 자가 민법상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정보 중 의료적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④입양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의 범위, 신청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단, 친생가족, 입양가족 및 입양인의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신상정보(이름, 주소 및 본적,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예외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u>자</u> 를 <u>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u>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u>사람</u> 을 <u>넘겨받았을 때에는 넘겨받은 날부터</u>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u>대행한다</u> .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u>인수한 때에는</u>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u>넘겨받은 경우에는</u>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5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u>자</u> 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이</u> 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u>사람</u> 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u>자</u> 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u>자</u>	1. 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u>사람</u> 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u>사람</u>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u>자</u> 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u>자</u>	2. 이 법에 <u>따른</u>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u>사람</u> 으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u>사람</u>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u>따라</u> 보고 받은 <u>사람</u> 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에 <u>따른</u>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u>하여야</u> 한다.
제16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인 국내에서 제4조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u>자</u> 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u>양자로 될 자</u> 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u>보</u> 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인 국내에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u>사람</u> 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u>양자가 될 사람</u> 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u>보</u>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	1.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u>양자로 될 자</u> 가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u>부양의무자</u> 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u>양자가 될 사람</u> 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u>그</u> 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u>입양알선</u>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u>양자로 될 자</u> 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u>입양을 알선</u>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u>양자가 될 사람</u> 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u>보건복지가족부령</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p> <p>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p> <p>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p> <p>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p> <p>제18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9조 (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p>	<p>②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u>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p> <p>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p> <p>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p> <p>제18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u>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u> 한다.</p> <p>제19조 (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6개월이내</u>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10조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u>입양이</u> 의뢰된 <u>사람</u>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3호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의1(입양절차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제6조의1 제2항에 의한 입양절차가 의뢰된 아동에게 발생되는 의료적 처치에 대한 절차와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의료적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과 입양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2. 입양기관이 후원하는 입양가정 모임 및 입양인 사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3. 개인정보의 열람 등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및 의료비와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u>따라</u>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3조의1(관계기관의 협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u>입양정보원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u>민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수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7조의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2. 제12조의1 제2항·제3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신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신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u>기타의</u>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u>한 때</u>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u>개인</u> 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u>그 밖의</u>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u>한 때</u> 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u>개인</u> 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토 론 문

이상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세계한인변호사회 이사)

이명숙 (대한변협 이사)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강영임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 소장)

한숙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배태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상 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차선자 교수님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민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신고를 기피하고 허위의 출생신고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수립할 때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입양 당사자인 아동의 복지와 권익이 중시되어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내용은 민법상의 입양에 관한 기본 법리나 민법전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입양요건은 강화하되, 그 절차상의 번잡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현재 시행중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법문의 구성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에 제시된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고 정립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 토론자로서 위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의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양대상아동을 기존의 요보호아동에서 탈피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으로 확장한 점입니다.

그 둘은, 종래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던 법리상의 쟁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그 문제점을 대거 해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입양절차로서 법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기관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상의 양자관련 규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입양 대상 아동을 미성년아동으로 확대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양 절차로서 신설되거나 추가된 내용도 종래 미진했던 법리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고려할 때, 과양 이후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8조의 2 뒤에 이어 과양된 미성년 아동의 후견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한 자(예컨대 보호기관의 장 등)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상의 요건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개정안 제7조), 이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양절차가 번잡하여 대부분 입양신고를 기피하고 허위의 출생신고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입양 절차가 더욱 더 까다롭게 되었다는 선입감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실질적인 요건이 강화되었다면(개정안 제5조 - 제6조의 1 등), 절차상의 문제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류(개정안 제7조 제1항의 1호 - 3호)를 제출한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법원의 확인」 절차만 거치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상의 입양은 법원의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6조의 1의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이후라도 입양신고 전까지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판단하는지 문제가 되고, 자의적인 철회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일정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의 1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입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립된 입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입양의 유형을 분류할 때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만 입법상으로는 구체적인 조문을 적시해서, 예컨대 「본 법 제6조에 의한 입양」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안 제12조의 1 제1항에 의하면, 「친생부모 및 그를 부모로 둔 형제」의 내용 중 「그」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는 「사람을 넘겨받았을 때에는 넘겨받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밖에 개정안의 법문 중에는 어색한 문투나 어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정안 제1조에서 「아동의 입양에 있어」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제6조의 1 제4항은 「금전을 지급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입양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더욱 명백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되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한 조문 내에서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예컨대 제12조의 1에 의하면, 「양자된 사람」, 「입양된 자」, 「입양인」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면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토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양한 입양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대응의 필요

가족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성년자들이 가족을 구성하여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와의 자연적인 친생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에 참여하여 가족생활을 하게 되는 미성년자의 입양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발제자가 파악하신 대로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양과 관련한 절차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부족합니다.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양을 구분하자면, (1)나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과 성년자 입양으로 (2)미성년자 입양 내에서도 대상 아동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신생아나 영아의 입양과 15세 미만자의 입양과 과년자의 입양으로, (3)입양의 효과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입양과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가적으로 창설되는 보통입양으로, (4)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5)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요보호아동의 입양과 일반 아동의 입양으로, (6)입양자의 선택이나 절차진행의 방식에 따라 기관입양과 개별입양으로, (7)입양의 방식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법에 의한 입양과 사실상의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입양, 기관에 의한 입양, 사실상의 입양, 보통입양, 해외입양 등이 복합된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대책이 필요합니다. 위 각 입양의 형태별로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입양 전반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입양 관련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입양관련 일반원칙은 (1)원가정 보호 및 가족해체의 방지 (2)진정하고 신중한 입양동의, (3)입양제도의 안정적 보장, (4)아동복지 최선의 원칙, (5)아동복지 최선의 원칙, (6)국내입양 우선의 원칙, (7)국가 혹은 공적 지원 및 부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과 현행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고 함)은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민법의 입양관련 규정의 보완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 전체의 보통입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통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친자관계가 부가적으로 창설되는 법정친족제도입니다. 보통입양을 통하여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는 대신 양친의 친권이 창설되므로 결국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래 보통입양의 경우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양부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본 특례법의 적용범위의 확대에 의하여 제8의 규정에 따라 양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8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에 의한 친생자 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민법상 친생자입양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8조의 내용은 특례법에 의한 입양(“이하” 특례입양“이라 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특례입양은 민법의 친양자입양과 절차나 효과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제도에외에 이러한 제도를 별도로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특례입양의 절차가 친양자입양절차보다 더욱 신중한 측면이 있고(양친이 되려는 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친생부모의 신중한 의사결정 및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판단), 영·유아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친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일거에 친양자 입양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한 기간이나 사전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요보호아동이 친양자에 더욱 적합함에도 그 절차의 진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특례입양 과정에서 양친이 되려는 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친양자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개별입양의 허용

입양과 관련하여 개별입양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양시장이 연간 2조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공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을 통하지 않은 무질서한 입양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관을 통한 입양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개별입양은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입양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공개입양이 수월하다는 월등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입양을 허용하되 입양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왕래한다거나 아동의 복리보다는 부모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하여 입양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는 등의 보완조치를 행한다면 개별입양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구성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제5조), 그 자격의 구비를 심사하여(제7조 제3항) 부적격자에게 입양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금전적 대가의 수수를 금하며(제6조의 1 제4항), 엄격한 요식을 갖춘 문서에 의한 절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6조의 1 제5항) 개별입양을 허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입양의 의사표시

입양은 양친이 되려는 자의 의사표시와 양자가 되려는 자의 승낙이라는 가족법상의 합의와 입양의 신고 혹은 법원의 허가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락과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후견인이 대락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5세 이상인 아동은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만 얻으면 양친이 되려는 자와 합의하여 입양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입양절차가 개시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개정안 제6조 제1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가 아동을 보장시설에 방치하거나 아동의 양육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등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거나 부모의 입양대락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의 동의의사 간주에 관한 제6조 제4항은 매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이 부모의 동의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되고 부모의 대락의사에 관한 내용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의 2의 친권상실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후견인에 의하여 대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정안 제4조의 2는 제6조 제3항 등과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에 대한 후견적 입양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친권을 방기하는 친생부모의 권리를 언제까지나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입양관련 친권의 상실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영·유아의 입양과 생모의 승낙

입양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모의 출산 직후의 입양승낙의 문제입니다. 동 입양승낙의 법률적 성질은 입양에 관한 부모의 대락과 동의가 포함된 포괄적인 의사표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생모의 입양승낙을 취소불능적 친권포기의 의사표시로 정리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자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채택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생모의 입양승낙은 친권의 항구적 단절과 입양절차의 개시라는 2가지 성격을 갖게 됩니다. 생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인 가족생활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헌법 제10조)를 보장받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자식을 찾아오려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입양제도의 본질과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는 양친과의 관계가 설정된 다음에는 입양의 동의나 대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모의 사전적 입양동의를 무효로 하고 신중하고 사려깊게 숙고한 다음 입양의 의사를 표하도록 정하고, 숙고와 관련한 정부나 단체의 지원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72시간의 숙려기간을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철회권을 법원의 허가결정시까지 허용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아의 입양의사와 관련하여 산모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산모가 생부를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생부를 확인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생부의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원가정보보호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생부의 수색과 고지에 관한 절차가 도입되었으면 절차적 안정을 위하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 출생신고의 문제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가임의 관행은 아동의 정보를 왜곡하고 개별적 입양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소지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의 입양관련 서류에 아동의 출생관련 의학적 자료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의 동의 등과 관련하여 생모관련 정보와 아동 관련 정보가 문서로 보존되어 제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으나 이 부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 친족이나 계부 등의 입양에 관한 특례

아동들이 친족이나 계부 등에 의하여 입양되는 것은 아동의 복리나 사후의 관리를 위하여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이 별도의 절차로 편입되지 아니한 점이 아쉽습니다.

9. 아동의 인도

입양대상인 아동의 인도도 입양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본 개정안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양친이 되려는 자가 먼저 등록되어 있으므로 기관 입양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기관이 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입양신청을 행하는 자에게 아동이 먼저 인도가 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당한 입양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아동을 먼저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입양신청이 기각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속하여 아동을 양육하되 아동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9. 중앙입양정보원의 기능

중앙입양정보원의 기능을 제9조의 3에 있는 사항과 같이 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과 평가 등의 업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입양기관의 인가, 운영, 관리, 감독 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입양사무의 정당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적인 감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입양관련 지원업무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양과 관련한 분쟁이나 법정절차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법조인을 구비하여 아동들의 권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양친, 친생부모 등과의 갈등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관련 정보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양친이 되려는 자와 입양을 하려는 아동의 정보입니다. 동 정보가 정당하게 배치하면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례법상 입양기관은 영리기관이 아니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보원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 해외입양

개정안 제17조의 해외입양절차는 전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양절차는 국내법의 절차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입양절차나 요건을 전부 구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개정안에서 정한 양친의 자격을 구비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에 의하여 특례입양 혹은 민법상의 입양의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행한 다음 외국으로 출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외입양을 국내입양과 별개의 절차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국내에서의 입양절차를 완비한 다음 본국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개관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현행 입양 관련 법을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고, 입양특례법의 적용 대상 아동을 ‘만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며, 모든 입양에 있어 법원의 개입을 규정한 또한 아동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의 주된 관심 대상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일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입양이 아니라 입양기관을 통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입양 아동들이라는 점, 일부 입양기관의 사실상 해외입양 우선 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현행 입양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행법상의 몇몇 조문 개정에 머물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입양시 법원의 개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불법적, 음성적인 입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한계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출생신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 해 몇 명의 아동이 태어나고 그 아동들이 친부모에게서 몇 명이 양육되며, 친부모의 양육에서 벗어나는 아동들이 몇 명이 되고 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출생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생 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국내외로 입양기관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입양되는 아동들(90% 이상이 미혼모에 의한 출생아동들임)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여전히 이들 아동들은 거대 수입사업의 대상으로 남아 밀거래될 수 밖에 없다.

2006년도 국감자료에 의한 국내 10대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입양부모의 97.5% 이상이 입양

을 거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이들 자료에조차 나타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수많은 불법 해외입양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개정안은 겨우 2.5%의 입양을 위한 개정안에 불과하며, 이 또한 법원의 개입이 의무화됨으로써 더욱 더 음성적으로 되어 버림으로써 2.5% 보다 낮은 수치의 입양 대상 아동들을 위한 입양 관련 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불법수익사업을 차단할 방법은 묘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병원에서 출생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도록 하는 법이 입양특례법 개정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 한, 입양 대상 아동이 특정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입양특례법의 몇몇 규정 개정 논의는 탁상공론 내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아동의 밀거래에 따른 불법수익사업을 근절시킬 의사가 있는 것인지, 국가의 근본정책인 인구통계, 출생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이다.

3. 원가정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입양 중심의 정책에서 원가정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입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원가정 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도 원가정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와 사회적 지원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과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멀고 입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양 중심의 해법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인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원가정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하더라도 입양될 수 밖에 없는 아동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위한 차선택으로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원가정 보호를 위한 더 활발한 입법과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친권상실 선고 규정 관련하여

입양시 친권상실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에서 2년, 입양기관

에서 1년간 친권자의 소재파악이 불명할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친권상실을 너무 쉽게 하는 조치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선고는, 개정안 제6조 제3항(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6조 4항(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를 받도록 함)만으로 충분히 보완이 되므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 규정 재검토의 필요성

개정안 제4조의2 등에서 ‘친권자’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바, 예컨대 이혼 후 모가 친권자로 되어 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더라도 부가 생존해 있을 경우 현행 민법에 의할 경우 부의 친권이 자동 부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아동에 대한 입양은 또 다른 친권자로 인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므로, ‘부모’와 ‘친권자’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각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본적’(개정안 제12조의1 제4항 등) 규정을 삭제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전문가에 의한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양친될 자격 및 입양 요건 관련

개정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양친될 자격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규정이어서 개정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양하는 자 및 양친될 자에 대한 입양관련 교육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증을 입양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개정안 제6조의1 제3항, 제7조 제1항, 제22조 등).

또, 현실적으로 15세 미만이건 이상이건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성인들의 필요에 의해 미취학 아동들, 특히 영유아들이 자의와 상관없이 입

양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 참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입양 현실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아동의 복리라는 차원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6조에서 ‘15세 미만의 양자될 아동의 의견을 참조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15세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라는 내용 속에 아동의 의견이 당연히 우선시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개정안 제6조), 15세 이상 아동의 명시적 의견을 반드시 전제하도록 하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입양 대비 해외입양에 대한 입양기관별 할당제 도입 등, 해외입양을 자제하고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개정안 제16조, 17조 등 관련).

7. 입양 관련 금전지급이나 대가 금지 관련

현실적으로 입양과 관련된 금전지급이나 대가의 수수가 오가는 경우가 허다함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6조의1 제4항의 ‘입양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으로는 무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입양기관의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엄한 제재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로, 개정안 제20조 제1항의 ‘...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제2항의 규정과 위 제6조의1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해 보이며, 오히려 입양의 의사표시 뿐 아니라 입양 전 과정에 있어서 입양기관은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입양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양부모될 자 등 그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파양관련

입양을 하였다가 양부모가 이혼하거나 양부모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경우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파양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파양을 당할 지위에 놓인 양자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자신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양자를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필요적 변호사항으로 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만 양친에 의해 함부로 파양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 친양자의 경우, 예컨대 모가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를 통한 입양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파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친양자를 신중하게 하라는 입법취지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친양자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제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협의 파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친양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개정안 제8조 관련).

9. 입양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의1 등에서는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입양기관 등에서의 입양관련 정보에 관한 의무규정과 제재규정이 없는 이상 입양기관에의 정보제공권(법 제11조, 제12조의1),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법 제23조의1) 등을 규정할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양기관에 아동이 입소되는 단계에서부터 입양 이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입양아와 그 부모, 양부모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입양기관에의 입소과정(병원, 미아 기아 고아 등), 입양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진, 혈액형, 유전자 등은 물론 입소과정(의뢰기관)을 포함한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무가 주어져서 이를 기록으로 영구보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입양기관의 영업장 폐쇄 등 인·허가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규정이 도입되도록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입양관련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입양하는 경우 벌칙 상향이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생률 최하위권인 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영유아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점, 아동성폭력법에 대한 하한선의 상향조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아동의 인권을 말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양육자를 임의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개정안처럼 관대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입양에 대한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보여 진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입양,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에서의 금전 수수 및 입양 관련 정보 및 자료보관 소홀, 기타 좀 더 구체화된 입양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잣대의 형사적 처벌과 과태료 조항에 머물지 않고 영업장 폐쇄 등을 포함하는 강한 행정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법의 온상인 현행 입양관련 문제점들을 시정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은 성 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성

-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이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된 이후 2008년 3월까지 9차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과거 요보호 아동의 입양촉진에 중점을 둔 법으로서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양제도로의 개선과 헤이그 협약 등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 TF」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적용범위를 기존 요보호 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한 점은 기존 입양특례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진일보한 것이다.

□ 입양허가제 도입

- 기존 입양기관의 입양만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입양도 모든 미성년자의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개입을 의무화한 것은 헤이그 협약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민법상 입양아동은 제외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 헤이그협약의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요보호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해서 협약상 국제입양 요건·절차인 국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다만,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민법과의 조화점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양환경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의 국내입양은 현행처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유지한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우선하는 동 협약의 원칙 상 국내입양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외입양아동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국가적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국내입양 활성화

- 2007년 이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서고 있으며, 국외입양에 앞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 중이다. 금번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내입양 활성화의 법적 근거와 지원확대를 명시하였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양육비 인상과 지원연령 확대 필요)외에 추가로 교육비 지원 명시 등 입양가정 지원 확대와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국가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 한편, 그동안 국내 입양문화는 가임 등 입양사실을 꺼리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었다. 비밀입양 문화가 공개입양의 문화로 바뀌어야 하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번 개정안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생자 신고가 가능토록 한 것은 국내 입양문화를 반영한 조치이다.

□ 양부모 자격요건 등

- 입양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동학대, 범죄경력 유무, 추가 등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충분한 재산기준 구체화, 입양아동과 양부모와의 연령차이 등은 여론을 반영하여 향후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 입양숙려제는 출산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입양숙려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예, 1개월)하나, 기본적인 방침은 친부모가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양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미혼모의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된다면,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그동안 친권자가 아동을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하고 장기간 연락 두절되는 경우에 해당 아동은 입양을 통한 가정내 보호 기회가 사전에 차단되어 왔다. 친권상실 청구를 통해 아동에게 입양기회를 확보해 주자는 취지이다. 물론 아동복지법에 친권상실 조항에 추가하는 논의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입양법에 담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중앙입양정보원 확대 개편

- 현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입양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헤이그 협약 비준에 대비한 것이다. 헤이그 협약은 협약 상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국제협력, 아동 및 양친의 입양적격여부 심사 등의 업무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 향후 중앙입양정보원은 협약이행의 총괄, 각 국 중앙국가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입양 업무 전담지원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관련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현 조직규모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 향후계획

- 정부에서는 오늘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시 개진된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내년 1월중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정부입법 절차를 내년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강 영 임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아동상담소 소장)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받고 읽으며 오랜 기간 입양을 위해 일해 온 저로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것은 친부모를 위한 법이지 입양 특례법이라고 왜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80-90%의 아동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혼모가 키울 가능성이 있는 10%-20% 아니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30%의 미혼양육모를 위한 법입니다. 미혼양육모 지원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면 될 것이지 왜 미혼양육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입양특례법에서 찾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마치 지금까지 입양기관 종사자들이 양육 할 수 있는 미혼모들의 아이를 입양진행 한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혼모들 중에는 정말 양육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기감정에 사로잡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종사자들을 난감하게 하지만 친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로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부모가 입양기관에 본인(미성년자의 부모)들의 허락도 없이 친모에게 아이를 키우게 하나면서 아이나 친모를 위해 입양이 더 바람직 한데 입양기관이 비협조적이라고 말하며 왜 자신들에게 입양동의를 하게 했는지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동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면 누구나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 입양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마치 이번 개정법에는 입양기관 종사자가 아이를 무조건 입양 보내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있어서 친권포기하고 친권을 상실하는 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친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친권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아동분만 후 좀 길게 일정기간을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양부모가 아이를 정하고 입양허가를 받기까지 짧으면 한 달 긴 경우 세 달 이상도 소요되어 본인들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진행해 왔는데 친모의 의사에 따라 어느 때고 취소되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모도 본인들의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입양은 입양선진국에 맞춘 듯하나 대부분 아이가 이미 양부모에게 인계 되고 난 후 나라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제출 시 바로 허가하거나 또는 아이가 양부모와 적응 기간을 두고 적응여부를 사회복지사의 보고에 의해 법원에서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자격에서부터 입양대상아동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모든 것을 법원 허가에 일임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완전히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자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충분한 재산을 가질 것 등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유한 가정에서만 입양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양부모의 연령대별 지역별 재산의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법원 담당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이 되어 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입양아동이 14만명이며, 그 중 일부 1%라고 하면 14-5천명의 성공적이지 못한 입양인이 해외입양을 반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입양인들이 해외입양 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양육되었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부로 발령을 받아 입양진행을 하려는 아이 중에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아동을 입양보내려 할 때 사람들이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발상을 하여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진행 하려 하는데 우리기관의 직원부터 친모가 2년 동안만 키워주면 데리러 오겠다는 쪽지가 있는데 입양을 보내면 안 되지요? 하는 말에 놀라고 입양하려는 부모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니“친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2년이 지나 3세가 되었습니다. 양부모에게 친모가 나타나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벌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개운치 않은 눈치여서 내가 변호사 비용을 5백만원 주겠다고 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입양허가를 득 하고자 신청을 하니 시청 담당주사도 같은 생각으로 허가를 하지 않아 결국은 담당자와 직접통화를 하여 친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야 하느냐 처벌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니 수궁을 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양현실입니다. 제발 친모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 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270개가 넘는 시설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주 적은 수의 경우를 생각하여 많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양육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만14세 미만의 아동만 두고 부모가 집을 비울 경우 바로 신고가 되고 세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역사회복지국에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강제로 위탁가정에 보내고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다시 아동을 방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확신이 있을 시에만 아동

을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부모가 아동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시에는 아동은 입양 보내지기도 합니다.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보다 입양하려는 양부모가 더 많아 역으로 해외아동을 데려와 입양 할 날을 고대 합니다. 그런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입양기관 보호아동의 위탁가정 보조금 지원요청

주요 4대 입양기관에서 연간 발생, 보호하는 아동은 약 3천여명, 이중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하루 평균 약 1,200명으로 연간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유지하기위해 위탁모 양육수당으로 아동 1명당 월 51만원을 지급, 연간 약 71억 정도를 지불해야하는 현실입니다.

@ 2010년 입양기관 위탁비 17,000원/1일 (월 51만원)

* 주요 3대 입양기관 보호아동

2010년 위탁 보조금 소요 예정액 (약 71억3천5백만원)

대한사회복지회	1,150명 x 365일 x 17,000원 = 17,135,750천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 더불어 2007년부터 아동의 첫5개월 동안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으로 입양진행 수속이 늦어짐에 따라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평균 10개월에서 1세까지 지내게 됨으로 위탁가정은 연장아동 양육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 또한 위탁가족의 얼굴을 알고 입양되어가는 아동과 헤어지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위탁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입양기관들은 과중한 위탁비용에 대한 부담과 아동의 장기보호 등으로 위탁가정 유지와 모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가정 유지를 위한 위탁가정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한 숙 회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 입양특례법 개정시 중점사항

- 입양아동의 복리 최우선
- 입양절차의 투명성, 적법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명시
- 입양기관의 업무와 권한, 책임 명확화
- 부당한 이득의 금지
-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함) 가입 전제
- 가정법원의 개입

2. 거시적 검토

- 입양특례법의 적용대상 확대
 -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함
 - 아동의 정의를 수치(18세, 19세 등)로 정의하는 것의 문제점(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와 불일치 가능성 존재)
 - 일반 입양아동과 요보호아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일반입양아동의 경우에는 현 개정안과 같이 당사자에게 아동특례법에 의한 일반입양이나 민법에 따른 친양자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줌이 상당.
 - 따라서 안 8조 3항(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생자 신고)은 민법에 친양자제도가 도입된 이상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부당한 이득의 금지
 - 입양협약 32조 1항은 ‘어느 누구도 국제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기타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2항은 ‘입양에 관여한 자의 직업상 합리적 보수를 포함하여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는 청구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입양특례법에도 위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일반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아동 매매 유사행위나 금전적 목적을 위한 입양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부모 선택 등을 위하여).

○ 입양협약의 가입을 전제로 법 개정 필요

- 현행법 상 국제입양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의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4. 11.자 결정에서 입양협약 가입권고
- 조속히 입양협약에 가입하여야 하고 입양협약가입을 전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미국 2008. 4. 1. 발효, 중국 2006. 1. 1. 발효, 다수의 유럽국가 가입, 2009. 10. 14. 현재 81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
- 현재 입양협약가입과 관련하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협동작업을 통하여 입양특례법의 일괄 개정이 필요함.

○ 입양아동의 완전한 정보 접근권 보장

- 성년이 된 입양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친생부모의 보호보다 입양아동의 알 권리가 우선함.
- 입양아동의 정보 접근 창구를 중앙입양정보원으로 단일화하여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여야 함
- 안 12조의1 3항 중 '제1항중 친생부모 동의 안한 경우' 삭제의견

○ 중앙입양정보원의 설치 및 역할

- 입양협약에서의 공적 기관(public authorities)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함
- 중앙입양정보원에서 모든 입양아동 정보의 보존·관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
- 안 9조의1 1항은 '입양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중앙국가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수정 필요('국내입양 활성화'는 지엽적이므로 삭제 의견).
- 안 9조의3 4호는 '입양 활성화' 앞에 '국내' 누락

○ 입양당사자로서의 아동의 의사 존중

- 현재 아동의 지적·신체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입양 대략의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12세 - 14세).
-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의사확인을 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아동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입양숙려제

- 원칙적으로 찬성함
- 더 나아가 비혼모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비혼모의 보호시부터 출산, 입양숙려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비혼모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해결하도록 명문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동의가 사실상 강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미시적 검토

○ 1조

- 개정안에 의하면 법 제목 자체의 개정이 필요함(목적에 요보호아동의 입양촉진이 빠짐)
- ‘보호와 복지(행복한 삶)증진’이 ‘권익(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과 복리(행복과 이익)’로 변경되었으나 이익이 중복됨. 권익과 복지증진 등으로 수정필요.
- 참고로 3조 4항은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규정(1조와 같이 보호보다 권익이 나온 것으로 사료됨)

○ 2조

- 항상 민법상 미성년자와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조문화 필요

○ 4조의2

- 취지는 이해하나 친권상실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4조의2의 행태는 6조 3항 1호의 ‘부모가 양육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또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5조 4항

- 적극 찬성함.
- 범죄경력에 접근과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개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되어 있어 하위 법령에 미루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12조 3항은 입양기관의 장이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기관의 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6조 2항

- 단서 조항 삭제 의견
-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입양아동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짐.

○ 8조의1, 8조의2

- 민법 규정을 참고하고 요보호아동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파양 당사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필요

○ 10조 3항

- 위 조항의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보호아동에 한하여 친양자 입양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 20조

- 양친으로부터 입양알선과 관련하여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함. 입양기관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끝.

배 태 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내의 입양발전을 위해 1995년의 입양특례법 전문개정에 이어 15년 후에 다시 큰 폭의 개정 작업의 결과를 접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러한 개정작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박숙자 가족정책관님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및 TF위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토론은 먼저 입양발전의 전제요건과 국내의 입양관련 문제점을 잠깐 살펴본 후에,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요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입양발전과 전제요건

어느 사회에서든 입양이 발전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입양아로서 정체감(identity)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성장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잘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그의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입양부모와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만족과 입양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어 곧 그 사회의 입양발전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정체감형성을 돕고 그의 자기가치감(self-esteem)을 증진시켜 입양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곧 그 사회의 입양발전을 위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가장 최근의 입양실무(adoption practice)는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자신의 뿌리인 친생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서신 등의 접촉을 통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전문가의 중재를 통한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간의 서면적인 의사소통합의문(communication agreement)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Grotevant & McRoy, 1998; Bai, 2005; Neil, 2006).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의 복지를 위해 입양 후 아동의 친생부모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아동을 친생부모에게 뺏기지 않을 까하는 두려움이 감소된다. 이것은 이러한 접촉 중에 자신들이 유일하게 아동에 대한 법적인 부모라는 사실이 자연히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아동의 뿌리(roots) 추구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입양부모가 자신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유일한 법적인 부모로서 아동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입

양아동 친생부모의 경우에도 접촉을 통해 입양으로 보낸 친생아동(birth child)의 삶과 복지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도 충족되고, 입양부모의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위치를 인정하며 심리적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입양의 본질에 기초하여 입양실무가 이루어 질 때 사회의 입양발전이 기대될 수 있겠다.

2. 국내 입양발전과 문제점

1) 혈연의식과 비밀입양

현재 국내입양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은 전통적인 혈연의식과 비밀입양이다. 국내에도 최초의 전국적인 입양가족들의 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MPAK)가 일반인들에게 입양부모와 입양자녀가 실제 어떻게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지에 대한 입양가족의 .모델을 지난 10년간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국내입양도 입양발전을 향한 궤도에 비로서 진입하였다 하겠으나, 입양대상아동으로서 주로 만 2세 이하의 신생아동(infants)인 여아(girls)들이 주로 선호되고 있으며, 남아(boys)나 장애아동, 나이든 연장아동들의 입양은 꺼리고 있다. 국내입양신청가족 중 대기가족은 대부분 신생여아를 기다리는 가족들이다. 남아는 가족의 성을 이어가므로 강한 혈연의식은 이것을 꺼리게 된다. 특히 국내의 장애아동입양 비율은 매년 1%~2% 이하이다. 이에 비해 해외입양의 장애아동입양 비율은 약 45% 이상을 차지하여 국내입양의 장애아동입양의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 단순히 입양대기가족수로서 아동보다 입양가족이 더 많은 것이 아니므로, 건강신생아가 아닌 형제아동, 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2) 불법입양의 성행

국내에서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는 불법입양이 성행한다. 현재 아동의 출생증명서 없이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아동을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나 철저한 입양의 비밀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조산소 및 산부인과 등을 통한 불법적인 사적 개인입양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입양은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보장을 못하며, 아동을 악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므로 이것의 발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배태순, 1993). 그러나 지금껏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까다로운 입양절차와 입양가족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다면 불법입양의 확대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불법입양의 규모를 단순히 유추해 보면, 1980년대 년 국내입양의 수가 2,000명~2,500명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1,200명~1,700명 수준으로 감소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3) 시설성장 아동들의 입양기회 부재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시설에 맡겨진 후 부모로부터 계속 접촉이 없음에도 부모의 친권박탈이 되지 않아 입양대상아동이 불가하고 퇴소 때까지 시설에 거주하며 입양의 기회가 부재한 시설성장아동이 되었다. (시설거주 아동들의 90%이상이 부나 모가 있는 아동들이다)

3. 개정안에 대한 토론

1) 입양아동:

- (1) 입양의 절차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을 포함시킨 것은 입양발견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취이다. 15년 전 전면개정 시에도,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처럼 가정법원의 관여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국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등록된 입양아동의 성이 입양부모와 다르게 되므로 이 경우에 아동이 이질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 정서적 안정에 좋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입양신청시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나, 입양허가 후에 입양이 종결되면(finalization) 아동은 입양부모의 성이 기재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받게 되어 다른 자녀들과 같은 성을 가진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원래의 정보(original birth certificate)는 법원에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봉하여(sealed) 보관한다.

국내에서 양친과 같은 성과 본을 따르는 현행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국내에서도 원정보는 법원이 보관하고 입양아동에게 입양종결시에 입양부모와 같은 성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 (2) 개정안은 시설 성장아동들에게 입양의 기회제공을 위해 2년간 소재파악이 불가한 부모로부터 친권박탈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내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혁신적인 성취이다. 이것으로 연장아동들의 입양이 예상되므로 장애아동들을 포함한 이러한 특별욕구(special needs) 아동들을 입양하는 입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상담비, 교육비 등에 대한 혜택을 크게 신장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으로 아동이 처음 입양대상아동이 되고 그 이후 입양된 후에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 것은 입양아동에 대한 권리신장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에도 국내아동들의 추적이 가능토록 해외입양부모의 국내의 입양네트워크 참여가 가능토록 될 것이다.
- (4) 해외에 입양된 성인입양인에 대한 혜택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한국시민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성인이 되어 모국에서 거주하여 일하고 싶은 경우에, 이들을 이중국적허용집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영구적인 거주와 자유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2) 입양부모:

- (1) 입양부모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사회는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에, 아동이 가정법원의 승인하에 입양이 되면, 주(states)에 따라 6개월~1년 후에 입양종결이 된다. 일단 입양종결이 되면 누구도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며, 아동은 입양부모의 영구적 자녀가 된다. 이것은 입양부모와 아동을 동시에 보호하며 입양부모뿐만 아니라 입양아동도 자신의 입양종결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므로 입양취소청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요구되며 삭제될 수 없겠다.
- (2) 입양발전과 입양가족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나 언급이 다소 결여된 듯하다. 즉, 입양과 출산은 자녀를 갖는 방법에서 차이점은 분명하지만 다같이 자녀를 갖는다는 점은 동등하므로 출산의 같은 혜택이 입양가족에게도 제공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출산 후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입양 후의 새로운 자녀와의 적응기간인 입양휴가 등의 필요이다.
- (3) 특히 장애아동들(ADHD 등 포함)을 입양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비, 교육비, 의료기구비를 포함한 의료비 등에 대한 혜택의 증가가 요구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국내아동들의 가정적보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친생부모:

- (1) 친생모의 입양동의 숙려기간 72시간 명시는 다소 긴 듯하다. 그러나 실제 입양동의 숙려기간의 길고 짧음은 친생모의 복지에 그다지 중요한 점은 아니다. 임신기간 중에 충분히 입양상담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숙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입양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의 후 철회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의 명시가 더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개인들이 출산 전에 충분히 숙려하여 출산 후에는 하루빨리 마음의 결정을 실행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2) 아동을 입양으로 보낸 후에도 친생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비 등을 제공하여 상실에 대해 애도할 수 있도록 친생모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입양기관:

- (1)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한 사후서비스기간의 6개월에서 1년으로의 연장과, 가정법원이 관여된 입양신청절차 등은 입양기관의 증가된 업무를 뜻한다. 입양은 정부의 아동복지사업이므로 입양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이해한 점에 대해 언급해 보으로써 저의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배태순(1993). 국내 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22.
- Bai, T. S. (2005). The State's provision of open adoption services to families and its effectiveness for adopted children and others involved in adoption: Oregon's experience. Building on Family Strengths Conference, Portland, Oregon, June 23-25.
- Grotevant, H. D. & McRoy R. G. (1998). Openness in adoption: Exploring family connection. CA: Sage Publication Inc..
- Neil, E. (2006). Coming to terms with the loss of a child: The findings of birth parents and grandparents about adoption and post-Adoption contact. *Adoption Quarterly*, 10(1), 1-23.

